

채란양계 상한선 규제 필요한가

—대군업자 규제보다 비농민 기업침투를 막아야—



한 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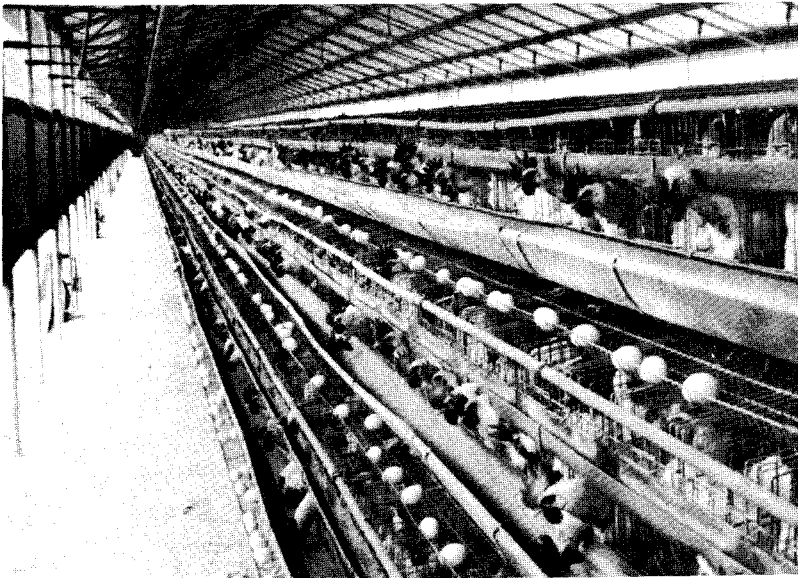
풍한농장 대표

지금까지 거의 30년이란 세월이 걸려 축산업이 그나마 기업화로 발전가능했던 것은 타농업에 비해 기술집약산업이고 그간 축산물의 수입개방이 억제되어 왔고, 지금까지 노동집약산업의 발전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선진국에 진입하려는 우리 산업사회에서 축산업 특히 고밀도 기술집약산업(이해안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이어야 할 채란양계업이 위기에 처한 것은

첫째, 작업면에서(연중무휴로 사료급여, 생산물 수거판매, 약취, 오물, 먼지, 파리 등)가장 불리(오히려 작물재배보다)한 산업으로 환경개선과 기계화 내지 자동화가 가장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분야임에도 축산선진국에 비해 20~30년 뒤진 원시적 생산방식에서 탈피 못한 상태이며,

둘째, 지금까지 재벌기업의 축산참여를 허용하면서 과잉생산물에 대한 대책도 없이 농가부업화를 장려한다는 명목하에 불필요한 행정규제로 산업발전에 앞장서야 할 전문기업 축산업의 발전을 억제하여 생산기반이 취약하며,



세째, 철저한 검역, 방역대책도 없이 전국적인 농가부업화를 유도하여 전염병이 상륙하면 순식간에 전국에 확산되어 거의 모든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상재지화되어 생산성이 낮으며 앞으로 가끔 인플루엔자같은 치명적 질병이 상륙시에는 대책도 없고

네째, 새해부터는 쇠고기와 같은 최소한의 보완대책도 없이 양계산물도 수입감시품목에서 해제되는 등 개방화의 물결에 휩쓸리게 되었고

다섯째, 지금까지 정책수립과정에서 전문생산자의 의견은 거의 무시된 채 정책에 참여하는 입안자나 소위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학자들이 축산분야별 양계산업의 특성을 너무 모른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소득향상에 따른 국민주요식품으로서 축산물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축산물의 생산기반과 품질향상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과제인 것이다.

따라서 축산업에 대한 규제는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생각하여 재벌급에 준하는 비축산 대기업의 축산업 침투를 강력히 저지하는 정도의 최소한의 규제에 그쳐야지 전문축산인의 기업의욕을 억제하여 영

세농의 소득을 향상시키겠다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말아야 하며, 앞으로 젊은 엘리트가 호구지책만을 위해 누가 낙후된 축산업에 투신하겠는가?

따라서 능력은 있으나 자금력이 약한 영세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정부 금융지원 등으로 육성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며, 지금까지 정부의 의지가 문제였지 법적 뒷받침이 없어 우리 농촌이 낙후된 것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체란계의 상한선 규제는 20~30년전 기술수준에 정체된 우리 수준에서는 과연 필요할런지? 축산 선진국의 수준은 접어두더라도 우리보다 여건이 조금 앞선 일본의 양계산업이 지향하는 inline system의 최저 경제수준이 20만수라고 하는데 앞으로 가내수공업 수준을 탈피 못한 우리의 양계기자재산업의 발전도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또 양계산업보다 시설이 단순하면서도 비교가 안될 정도로 소득이 컸던 양돈의 상한선이 1만두라면 앞으로 발전할 산업간의 형평문제를 고려하더라도 과연 국내에 이미 비교될 체란양계장이 존재하는가? 하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 앞으로 이념을 초월하여 동북아시아

다른 산업부문의 중소기업에 비교하면 보잘것 없는 축산업체의 발전을 위해서 입법적 규제보다는 모순된 제도로 착취당하고 있는 축산업자를 보호해주는 것이 오히려 선결과제라고 생각한다.

경제권이 형성될 때, 최근 갑작스럽게 발전하는 저임의 인구대국 증공의 양계산업 발전과, 앞으로 관세없이 남북교류가 이루어질 때 인구 2,000만에 1,800만수의 닭을 보유(소득과 인구 1인당 닭 보유수를 비교할 때 거의 우리수준 육박)하고 있는 북한의 양계산업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국내에도 10만수 이상의 농장이 몇개 있지만 이들로 인하여 양계산물이 독과점이라든가 가격조작이 있었다는 일은 지금까지 듣지 못했으며 이들로 인해 양계산물가격이 불안정했다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 자신을 알지 못하는 아전인수격 주장이다.

앞으로 양계수익의 마진폭은 더욱 좁아질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므로 경영개선없이 자금력만으로 숫자만을 늘릴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 업계의 병폐는 기술, 시설, 경영개선은 뒷전에 제쳐두고 숫자늘리기에만 급급하고 조직적인 참여의식이 부족한 우리 양계인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할 때 이러한 문제들이 규제나 제도로 해결되리란 것은 너무 안이한 생각이요, 오히려 낙후된 체란양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재벌들이 참여하고 있는 몇개 양돈업체를 제외하고는 말이 기업축산이지 다른 산업부문의 중소기업에 비교하면 보잘것 없는 축산업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입법적 규제보다는 모순된 제도로 착취당하고 있는 축산업자를 보호해주는 것이 오히려 선결과제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건축비가 평당 몇만원에 불과하고 기술적인 설계나 감리가 필요없는(오히려 축사에 관한한 건축설계사보다 양축업자가 더 잘 알것임).

단순한 축사신축허가시(200평 이상일 때는 건설면허업체 선정까지 필요하여 형식적인 도장값까지 평당 몇천원 이상 요구됨) 평당 100만원 이상드는 고급주택이나 빌딩, 공장의 설계, 감리비(평당 1만원 가까운 금액)와 비슷한 비용이 요구되니 이러한 낭비적인 행정요식 행위를 양축업자가 직접 평면도나 그려 관련 관청에 제출케한다면 그러한 비용으로(단열수치 10이상을 유지키위한 비용) 축사에 단열재를 시공케하여 계사온도가 10℃ 이상의 보온효과를 가져와 110g 먹는 닭의 사료가 10% 이상 절감되고 현재 우리가 철폐를 요구하는 사료부가새 10% 이상의 효과외에 값비싼 도입사료 곡물에 따른 외화절감, 보온으로 인한 계사 환기개선 등으로 1석3조 이상의 효과를 가져온다.

또 독극물도 아니고 값비싼 유기질 비료로 대체 사용가능한 축산폐수 설비는 폐기방류만 안되는 단순한 집거시설만 갖추면 되는데 이것도 폐수 설비허가 등록업체가 설계 시공하지 않으면 준공이 안되도록 하여 표준설계도라는 것이 있지만 얼마나 실제적인 타당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들이 단순한 집거시설에 대한 설계감리비로 상당한 금액이 요구되는 등 불합리한 착취행위를 당하고 있다.

또, 토지와 건물은 축산에서 2차산업의 기계설비와 같은 기본 고정자산인데 재벌들의 비업무용 토지 은닉수단 때문에 전문축산업체들까지 부동산투기억제대상(축산에 생계를 대고있는 사람이 자기업을 그만두기 전에야 어찌 고정자산을 투기대상으로 삼겠는가?)의 영향을 받고 있는 등 이러한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정부에서도 부담이 안되는 더 시급한 선결과제라고 생각한다. **양계**